

특 집

개인화 시대의 생활민주화* : 촛불혁명 이후 미투운동과 갑질저항 사례

주성수 (한양대)

갑질저항, 미투운동, 비리고발 등으로 개인들이 앞장서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는 왜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개인들이 앞장서 세상을 바꿀 기세로 일어나는 ‘혁명적’ 변화는 개인들이 국가나 시장이나 시민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화라는 의미에서 ‘혁명적’이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이 바꾸는 세상>인지, 그 추세가 많이 진전되어 거슬릴 수 없는 대세가 된다면, 이것은 87년 민주항쟁 이후 최초의 새로운 ‘민주화’ 패러다임 이동이 될 수 있다. 정치민주화에서 ‘생활민주화’로의 이동이 아닌지, 평가해볼 만하다.

그런데 이런 <개인이 바꾸는 세상>이라는 변화가 가능해진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지, 우선 여기에 이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2016-17년 촛불혁명이 학계나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핵심적인 배경요인이지만,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생활민주화에 대해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부당함, 부조리에 직접 나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이나 개선을 위해 직접행동에 나서는 과정”으로 좁은 의미로 정의하며, 생활민주화를 가능하게 했던 시대적 배경요인들에 주목한다. 촛불혁명을 비롯해, IT 혁명, 직접행동주의, 국력신장, 가치관 변화 등 다섯 가지에 초점을 맞춰, 국력신장 → IT혁명 → 촛불혁명 → 직접행동주의와 가치관변화 → 생활민주화로 발전되는 연관성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갑질 추방, 미투운동이 전통적인 권위 중심의 가치관의 장애물을 넘어, 더 나아가 생존의 허들까지 뛰어넘어 진정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주제어: 생활민주화, 생활민주주의, 미투, 갑질, 내부고발, 개인화, 가치관 변화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7년도)

1. 문제의 제기 : 개인화 시대의 생활민주화

갑질저항, 미투운동, 비리고발 등 개인들이 앞장서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는 왜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개인들이 앞장서 세상을 바꿀 기세로 일어나는 '혁명적' 변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변화는 일반적으로 국가나 시장이나 시민사회 기관들이 주도해온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지금은 개인들이 국가나 시장이나 시민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화라는 의미에서 '혁명적'이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이 바꾸는 세상>인지, 그 추세가 많이 진전되어 거슬릴 수 없는 대세가 된다면, 이것은 87년 민주항쟁 이후 최초의 새로운 '민주화' 패러다임 이동이 될 수 있다. 정치민주화에서 '생활민주화'로의 이동이 아닌지, 평가해볼 만하다.

그런데 이런 <개인이 바꾸는 세상>이라는 변화가 가능해진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지, 우선 여기에 이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2016-17년 촛불혁명이 학계나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핵심적인 배경요인이지만(조희정 2018; 홍찬숙 2018), 다른 주요 시대적 배경들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먼저 갑질저항과 미투운동에 주목해 개인들이 경험하는 부당함에 대한 직접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갑질과 성폭력 상황이 매우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국민 절대다수가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갑질의 경우, '누구나 갑이 되고 싶은 사회'라는 심각성이 있다(최항섭 2017). 국민 100명 중 95명은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갑의 횡포가 심각하다고 답했다.¹⁾ 자신이 갑인지 을인지에 대해선 85%가 을로, 갑

1) 2015년 1월 한국언론재단의 설문조사. KBS TV 뉴스 2015.1.26.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009234>

은 단 15%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자신도 갑의 횡포를 부린 적이 있다는 응답도 41%나 됐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직장 내의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 설문 응답자의 31.5%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²⁾ 하지만 41.3%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전국조사에서도 갑질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절반이 넘었고(54.3%),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95%를 넘었다.³⁾

미투운동의 경우, 문화예술계가 우선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지목받아 왔다. 문화예술계 종사자 3718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성응답자 2478명 중 57.5%가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⁴⁾ 또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변호사, 언론인 등 전문직 여성 1015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중 절반(50.1%)이 직접적인 성희롱이나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⁵⁾ 국민절대다수(68%)는 '미투 운동을 좋게' 본다고 답하며, 그 이유를 '감춰진 사건들이 밝혀짐/과거 바로잡기', '사회적 변화·개혁 필요'를 요청한다(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2018.3.20-22).

개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직접행동은 미시적 분석을 요구하지만 이는 이번 연구의 범위 밖에 있다. 개인들의 직접 행동이 집합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거시적 배경요인 분석이 이번 연구의 범

2) 노동건강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등으로 이뤄진 '직장갑질 119'가 여론조사기관 한국씨앤알에 의뢰해 직장인 710명을 상대로 1주일 간 온라인 조사한 결과, <http://www.slist.kr/news/articleView.html?idxno=22230#09Pr> (2017.11.1.)

3) 2018년 1월 24일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한국사회 갑질문화 인식조사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lIdx=1632&code=0404&trendType=CKOREA>

4) 2018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운영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5) 중앙일보, 2018.11.5. <https://news.joins.com/article/23098169>

위이자 초점이다.

미투운동이나 갑질저항은 '개인화'(individualization)의 시대 배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인화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생존 기반의 변화와 함께 경쟁하는 사회로의 변화를 의미한다.⁶⁾ 가족 및 친족, 조직 등 전통적인 안전이 유지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모두 알아서 살아남아라. 생존은 너의 선택의 결과이다.'라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는 사회로의 변화를 의미한다(이선미 2018: 64). 개인화 시대의 개인은 불확실성 속에서 견디며 살아야 하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변화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찾기도 한다(앞글: 65).

2. 생활민주화: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민주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뿐 아니라 일상생활 어디서나 존재한다. 직장, 학교, 이웃, 지역사회 등 개인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민주주의가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제기되는 미투운동, 갑질추방, 비리고발 등도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 부당함에 대한 직접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런 현상을 '생활민주화'(everyday democratization)로 제시해볼 만하다.

1) 생활민주주의의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 정치와 경제 차원의 민주주의가 통용되고 있지만,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서도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일부 연구들이 '생활민주주의'(democracy in everyday life) 또

⁶⁾ Ulrich Beck & Elisabeth Beck-Gernsheim. 2002 (이선미 2018에서 재인용).

는 ‘일상 민주주의’(everyday democracy)로 제시하고 있다.

낸시 로젠블럼(Nancy Rosenblum, 2016)은 저서 『좋은 이웃: 생활민주주의(*Good Neighbors: democracy in everyday life*)』에서 생활민주주의는 국가 차원의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다고 강조한다. 생활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사적 영역이자 개인적, 인간관계의 영역”으로 보며, “조직화된 사회적, 정치적 생활이 통합성을 상실하고 별 의미가 없게 되면 그때 생활민주주의는 우리의 민주주의 의지를 지탱하는 나침반이 된다.”(p.248)고 설명한다. 또 “공공 생활이 정의롭지 않거나 그것을 바꿀 영향력도 한계에 달하게 되면”, 또는 “정부와 정치에 대해 그리고 동료 시민들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에 달하게” 되면 생활민주주의는 든든한 생존자가 된다고 본다. 그렇다고 생활민주주의가 정치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도 아니고 또 정치적 재앙에 대한 보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생활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의지를 지탱하는 근거라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정치 생활 밖에서 또 특정 제도에 구속되지 않는 사회성(sociability)의 경험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로젠블럼은 생활민주주의의 성공은 상호성(reciprocity), 발언(speaking out), 사생활 존중(live and let live)에 있다고 설명한다. 먼저 이웃이 서로 상호성의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 또 이웃이 소란, 소음, 괴롭힘 등의 피해를 주면 발언하는 것도 생활민주주의의 필수 요소가 된다. 국가의 공식적인 제도가 잘 시행되지 않거나 효율성과 효과성이 없는 경우, 사회적 압력이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생활민주주의는 이웃들이 서로에 대해 ‘도덕적 경찰’ 노릇을 하지 않을 때 발전한다. 좋은 이웃간의 관계는 개인의 삶에 대한 존중 정신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고 타인의 생활을 도덕화하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이론적 시각은 마크 스테어스(Marc Stears, 2011)의 『일상 민주주의(*Everyday Democracy*)』이다. 그가 제시하는 일상민주주의는

“잠정적으로 대립적인 개인들 (집단들) 사이의 관계가 일상생활에서 차이를 극복해 공동의 행동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p.27). 그는 민주주의에 대해 일반적으로 ‘거대한 정치적 제도’를 생각하기 쉽지만, 민주주의의 핵심은 배경, 경험, 관심의 이해가 서로 다른 개인들이 함께 집합적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대면 또는 온라인상의 관계들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여기에서 관계란 개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단순한 연계로, 감정, 이성 또는 단순한 계몽적 사익에 기반한 연계이다. 이런 관계가 ‘민주적’이라는 특별한 이유는 관계가 없음으로써 긴장과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관계를 통해 개인들이 서로 존중하고 문제해결을 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그는 직장 동료 사이에서, 지역공동체의 이웃 사이에서 다툼, 부당함 등을 해결하며 공존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민주적 관계가 일상화되는 생활민주주의를 새로운 민주주의로 제안한다(Stears, 2011: 26).

마지막은 벤클러(Benkler 2006, 2011)의 저서에서 나타나는 개인들의 온라인 네트워킹이 창출하는 생활민주주의 시각이다. 그는 저서 『네트워크의 부(The Wealth of Networks)』에서 개인들 사이의 ‘이기주의를 넘어선 협력’이 가능한 것은, ‘네트워크된 정보경제’가 개인의 실천적 역량을 개선시켜 일상생활에서의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하기 때문이라 설명한다(Benkler 2006: 8-9). 1) 자기 스스로에 의해 스스로를 위한 활동 역량이 개선되며, 2) 타인과의 관계가 시장 가격제나 전통적 조직들을 통하지 않고도 느슨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역량이 개선되고, 3) 시장 영역 밖에서 운영되는 비영리 조직들에서의 활동을 확대하는 개인의 역량을 개선시켜준다. 이처럼 타인들과 협력하는 새로운 실천적 자유를 활용하는 개인들은 민주주의의 실천적 경험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터넷이 ‘문화의 민주화’를 강조한 선행연구자들과 같은 입장에서 문화가 민주화되는 근거를 개인들의 자기반성적, 참여

적 역량의 증대로 제시한다. 비판적, 참여적, 자기반성적인 개인들의 역량 증대가 정보경제의 '핵심적 사회주도세력(a core driving social force)이라 소개된다(앞글: 15).

이상의 세 저자들이 제시하는 이론적 시각을 정리해보면 생활민주주의는 개인들이 이웃, 직장, 학교, 사회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부당함 또는 불편한 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 또는 개선하는 민주적 관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생활민주화의 의미

이 논문에서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제기되는 미투운동과 갑질추방 등 개인들이 겪는 부조리, 부당함에 대한 문제제기와 합리적 해결방식으로서의 생활민주화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서 생활민주화란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부당함, 부조리에 직접 나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이나 개선을 위해 직접행동에 나서는 과정"으로 좁혀 얘기해볼 수 있다. 앞서 정의한 생활민주주의(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부당함 또는 불편한 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 또는 개선하는 민주적 관계)를 지향하는 활동, 운동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개념정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 첫째는 문제제기의 주체가 개인 당사자라는 것이다. 단체가 아닌 개인이 피해자로서 또는 고발자나 목격자로서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전통적인 정부기관이나 사회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가 맡아온 '대리' 역할을 개인이 직접 '내가 대표한다'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희정(2018)은 이를 "깃발 내려,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주제로 설명한다.

둘째는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부당함, 부조리에 초점을 맞춘다. 미

투운동이나 갑질추방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번 연구의 초점이 된다. 그 밖에도 세월호 참사, 채용비리, 불법촬영(몰카) 등도 절대 다수가 인지하고 동의하는 부당함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가 아니지만 간접 피해를 당하거나 또는 '나와 내 가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직접행동을 하는 것이 생활민주화의 핵심요소가 된다.

셋째는 여러 사람들과의 '소통'과 '공감'에 기반한 문제제기와 공론화 방식이다. 전통적으로 타인과의 '공감'은 제한적으로 친지나 동료 등에 국한되었지만, IT 혁명 덕분에 개인이 온라인에서도 자신과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있다.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을 매개로 하는 공감대 형성과 문제제기가 이번 연구에서 핵심적인 공론화 방식으로 파악한다.

넷째는 직접행동이다. '직접행동'이란 전통적으로 개인들이 조직화된 집단행동에 국한되어,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 등 단체를 통한 참여활동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생활민주화에서는 개인들이 조직을 통하지 않고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타인과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소통과 공감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이 직접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고발자, 공감자들이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 고발하는 직접행동뿐만 아니라 가해자 처벌 등 문제해결을 위한 법 제정이나 제도 마련을 압박하는 집회나 시위, 국민청원 등의 직접행동이 일반화되고 있다. 미투운동의 경우, 김현미(2018: 7)에 따르면, "성평등과 문화적 다원주의를 포함한 직접행동주의"라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는 IT를 기반으로 하는 직접행동이다. 갑질저항, 미투운동, 비리폭로 거의 모두가 온라인에서 개인들의 직접행동으로 이뤄지며 언론에 제보되며 보도되고 사회이슈가 되는 경로를 거치는 특징이 있다. IT는 정보를 생산하는 방식과 사회의 지식 기반에 혁명을 일으킨

주역으로 평가받아 왔다. 벤클러(Benkler 2011)는 “정보와 뉴스, 지식과 문화, 그리고 컴퓨터 매개의 사회적, 경제적 상호작용이… 삶의 모든 측면에서 모든 일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한다(p.23).

마지막은 개인들의 자발적인 문제해결 방식이다.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부당함에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생활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따라서 국가나 시민사회가 생활민주주의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해 추진되는 전통적인 대의제 방식을 신뢰하지 않고 거부한다. 갑질저항, 미투운동의 피해자나 고발자 대부분이 개인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행동에 나선 특징이 있고, 정부나 시민사회에 문제해결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미투운동을 비롯한 페미니즘운동은 “전문가주의나 국가 제도에의 의존이나 종속을 경계”하며, “나의 참여와 승인 없이 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규정과 개입에 거부감을 갖게 된다.”(김현미 2018: 7).

3) 분석틀 : IT 혁명 → 촛불혁명 → 생활민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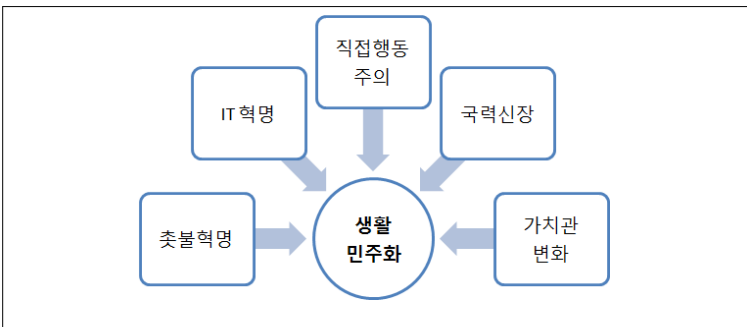
이 연구는 이전의 정치민주화와 다른 생활민주화로 구분해, 이런 구분이 가능한 근거와 배경을 우선 IT 혁명과 촛불혁명으로 파악해 분석한다. 촛불혁명 이전의 정치민주화와 구분되는 생활민주화는 여전히 촛불혁명의 진행형이며 또 IT 혁명에 기반한 것으로 파악한다.

촛불혁명과 정치민주화의 배경 요인들은 생활민주화에서도 주요 배경요인들이 되면서도 개인의 직접행동이나 가치관의 변화 등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배경요인들로 분석된다. 생활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정치에서는 입법과 정책제도화가 진행되지만 직접민주적 요구에 대한 대의제의 거부도 발생하며, 경제에서는 직장 내부고발, 소비자행동이 주목되지만 경제침체 등으로 여론형성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

다. 사회에서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피해자 보호 등 주창 역할이 지속되지만 주류를 유지하는 데는 가해자 반발, 경제악화 등 한계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문화는 지금의 갑질저항이나 미투운동의 배경요인이자 동시에 장애물로 제기된다. 청년층 중심의 가치관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지만 전통적인 권위에 대한 존중이나 생계에 얽매인 생존가치관이 개인들의 직접행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갑질추방, 미투운동 등 생활민주화가 최근에 심각하게 제기되는 시대적 배경요인을 촛불혁명, IT 혁명, 직접행동주의, 국력신장, 가치관 변화 등 다섯 가지에 초점을 맞춰 <그림 1>과 같은 분석틀을 제시한다. 이들은 각기 밀접히 관련되는데, 서로간의 인과적 관계를 살펴보면 국력신장 → IT혁명 → 촛불혁명 → 직접행동주의와 가치관변화 → 생활민주화로 제시해볼 수 있다. 시기적으로 산업화 이후 민주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국력신장을 통해 IT 혁명이 가능했고 또 IT 혁명으로 국력이 신장되는 상관성이 있다. 이런 국력신장과 IT 혁명이 있었기에 촛불혁명과 오늘날의 생활민주화가 가능했으며, 또 직접행동주의와 가치관 변화는 촛불 혁명 이후의 미투운동과 갑질저항의 배경요인으로 제시해볼 수 있다.

<그림 1> 생활민주화의 배경요인들



먼저 2016년 10월말부터 시작되어 2017년 3월초까지 진행된 촛불혁명을 우선 주목해볼 수 있다. 개인들의 미투운동이나 갑질저항 등 직접행동을 촉발시킨 핵심적인 촉발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IT 혁명은 촛불혁명에도 참여자 공감과 집회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개인들의 직접행동에도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도구가 된다. 그리고 개인들의 직접행동은 나를 대신하는 대의제에 대한 불신과 함께 내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나의 문제 또는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식이 쉽게 공감대를 형성해 직접행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보다 거시적 접근을 해보면 그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국력 신장 또한 생활민주화를 가능하게 만든 배경요인들로 분석할 수 있다. 국력 신장에 걸맞는 생활 세계에서의 갑질, 폭력 추방 운동이 자연스럽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가치관의 변화도 상당하지만 모든 세대, 모든 계층에 걸쳐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음표를 달아본다. 전통적인 '권위에 대한 존중'이나 생계에 의존하는 '생존' 가치관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린 문화적 전통으로 갑질추방이나 미투운동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뛰어넘어야 하는 장애물로 나타난다.

3. 분석: IT 혁명 → 촛불혁명 → 생활민주화

<그림 1>에서 제시한 생활민주화에 대한 배경요인 다섯 가지를 차례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촛불혁명 → 생활민주화부터 분석해 본다.

1) 촛불혁명 → 생활민주화

'촛불혁명'은 이제 학계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되고 있다.⁷⁾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 국회 절대다수의 의결, 헌재 재판권 전원일치의 판결로 '촛불혁명'이 완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주성수 2017a). 그래서 과거의 민주화운동이나 민주항쟁과도 전혀 다른 '혁명'이 되었다.

2016년 말 대통령 탄핵을 이끌던 촛불집회 시위는 1987년 6·10 민주항쟁 시기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의 참여수준을 뛰어넘어, 새 역사의 기록을 남긴 '시민혁명'이었다(주성수 2017a: 353). 일반시민들이 주도하는 촛불집회는 '촛불 민주주의'라고 논의될 정도로 한국 민주주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혁명적이었다.

시민들은 2002년부터 저항과 분노의 촛불을 켜들기 시작했다. 미군 장갑차에 치어 사망한 두 여중생 사건에 무기력했던 정부와 미국에 저항했고, 2008년에는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장기간의 촛불집회로 맞섰다. 또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방치한 정권의 무능과 직무유기에 절규했고, 2016년에는 국정농단을 일으킨 대통령에 탄핵의 촛불로 맞서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섰다.

촛불집회와 시위는 시민 주도의 준법, 평화 시위로 정착된 특징이 있다(앞글: 354). 노조나 시민사회단체 주도 활동에 치우치지 않고 각 계각층으로 대표되는 자발적 시민들이 이슈별로 '시민 전문가'로 나서는 새로운 시민 주도의 무대가 되었다. 이들은 온라인 학습과 집단지성을 통해 사회, 경제, 정치적 이슈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참여함으로써 '비판적' 시민으로 성장했다(앞글: 354).

7) 학술데이터베이스(KISS)에서 학술 원고 18개가 검색된다(2018.11.5.) <http://kiss.kstudy.com/>

(1) 촛불집회 참여자 : 단체보다 네트워크된 개인들

촛불집회에 누가 어떻게 참여했는가? 2017년 7월 한국갤럽의 전국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촛불혁명 집회 기간, 20세 이상 성인 가운데 8.8%가 한 번 이상 집회에 참여했다(주성수 2017b). 참여자는 성별에는 큰 차이 없게 나왔지만 세대별로는 차이가 뚜렷하다. 20대가 18.2%, 30대 10.5%, 40대 12.7%인데 비해 50대 3.6%, 60대 2.7%로 푹 떨어진다. 특히 여자 50대와 60대 이상 참여가 매우 낮다. 또 청년층은 취직이 안 되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상태에서 치솟는 등록금에다 각계에서 드러난 채용비리에도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이화여대 특혜 입학에도 분노해 대거 참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지배한다는데 청년들의 분노가 불타다.

또 참여자는 단체보다는 개인으로서 촛불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체 소속이 참여가 9.1%로 단체 무소속 참여율 8% 보다 다소 높지만, 여기에서 단체 소속이란 향우회, 친목회 등 다양한 사교단체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통적인 노조나 시민사회단체 소속으로 참여한 것과는 다르다. 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참여율은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 활동' 개인들로 일반 참여율(8.8%)보다 세 배 높고(26.4%), 참여와도 가장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여준다. 온라인 소통과 공감을 통해 오프라인 집회와 시위 참여로 이어지는 경로를 주목해볼 수 있다. 인터넷, SNS 등으로 지식과 정보와 식견을 갖춘 개인들의 공감과 소통 등 자발적 참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속하게 움직였고, 시민들은 카페, 자조모임, 학부모모임 등 소규모 생활공동체에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했다.

〈표 1〉 촛불혁명 집회 참여자 특성

	촛불집회 1회 또는 2회 참여	촛불집회 3회 이상 참여	집회참여와 상관관계
전체 (20세 이상 인구)	7.3%	1.5%	n=1,500
남자	7.9	1.9	0.033
여자	6.8	1.2	
20대	15.7	2.5	0.185**
30대	7.9	2.6	
40대	10.8	1.9	
50대	3.3	0.3	
60세이상	1.9	0.8	
중졸이하	1.0	0.5	0.149**
고졸	3.7	1.2	
대재이상	13.0	2.2	
199만원미만	1.1	0.0	0.184**
200-299만원	2.9	1.2	
300-399만원	4.4	1.5	
400-499만원	10.6	1.4	
500만원이상	13.8	2.7	
대도시	8.9	1.8	0.059*
중소도시	6.4	1.1	
읍/면	3.4	2.6	
단체 소속	7.4	1.7	0.015
단체 무소속	7.0	1.0	
인터넷카페/커뮤니티		26.4	.157**
정당/정치단체		25.0	.051*
구호/복지단체		17.2	.059*
시민사회단체		13.6	.020
직장/노조/직능단체에체능 /취미동호회		13.3	.049
동창회/향우회		12.1	.033
동창회/향우회		11.6	.085**
종교단체/소모임		11.4	.039
자녀학교/학부모회		9.6	.007
전우회/재향군인회		9.1	.001
친목회/계모임		8.8	.005
지역풀뿌리조직		2.3	.028
자조모임		1.5	.055*

참고: 한국갤럽이 2017년 7월 17일 ~ 8월 18일 기간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

참고: *0.05, **0.01 유의수준, 자료: 주성수(2017b).

(2) 촛불혁명 집회참여자 분석

갑질이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 개인들은 어떻게 직접행동에 나서는가? 어떤 이는 세상에 알리는 목소리(voice)를 내고, 어떤 이는 없었던 것처럼 현상에 머물고(loyal), 어떤 이는 퇴장(exit), 도피하는 등 다른 선택을 한다. 이런 선택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적 동기의 차이뿐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차이, 행동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을 파악해볼 수 있다(주성수 2015, 2017a; Verba et al 1995).

첫째, 동기(motivation)에서는 행동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행동의 중요성이나 행동에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며, 불참자는 관심이 없거나 행동의 중요성이나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역량(capabilities)에서는 행동에 필요한 개인적 역량(학력 또는 소득 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행동하며, 비참여자는 이런 역량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으로 구분된다.

셋째, 관계망(networks)에서는 행동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관계망이 필요하다. 누군가 또는 어떤 모임에서 행동 요청을 받으면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행동에 나서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는 개인들의 경우,

- 동기에서는 행동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 역량에서는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 관계망에서는 행동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동기, 역량, 관계망 모두 충분해도 직접행동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형 사회변혁, 국가적인 경제위기, 정치혁명으로 개인의 직접행동이 촉발(trigger)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IMF 외환위기, 촛불혁명 등이 대표적인 촉발 요인들로 볼 수 있다. 한편 직접

행동이 지속되려면 행동 이후 긍정적 경험, 즉 효능감(efficacy)과 주변의 충분한 자원(지지 등)이 필요하다. 반면에 직접행동의 중단은 부정적 경험(개인의 효능감 상실)이나 또는 주변의 지지 등 자원의 결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분석 결과 : 온라인 네티즌들의 상대적 영향력

촛불혁명 참여자 로짓분석 결과는 참여자의 동기, 역량, 관계망의 상대적 중요성을 보여준다(표 2). 먼저 참여자의 역량, 즉 개인의 학력과 연령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있다. 고학력자와 20-30-40대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또 참여자의 관계망을 알아보는 소속단체에서는 인터넷 카페와 모임활동이 가장 두드러진 요인으로 제시된다. 온라인에서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개인들의 대화와 학습과 소통 관계를 통해 촛불집회와 시위 현장에 참여한 경로와 배경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촛불집회 참여자들은 단체 소속이나 단체의 깃발 아래 집단적 참여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참여하는 특징이 있다. 촛불혁명 참여자 인터뷰에서도 참여자들은 단체로서가 아닌 개인으로서, 난생 처음 시위에 나가봤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촛불혁명을 통해 많이 확인한 것은 말하면 들어주는 사람이 있더라. 뭔가 얘기했을 때 공감하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확인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세요”(홍찬숙, 2018: 2).

“이제는 말 할 수 있다,” “이제는 나설 수 있다” 이런 효능감은 이후 일상에서의 부당함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생활민주화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현상은 촛불혁명을 계기로 정치민주화에서 생활민주화로 넘어가는 과정의 한 측면이라 볼 수 있다. 정치민주

화가 완결되었다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의 관심과 초점이 정치민주화 -> 생활민주화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미투운동이나 갑질추방이 촛불혁명 이후에 본격화한 것도 촛불혁명의 사회적 효능감으로 볼 수 있다. 촛불혁명이 있었기에 미투운동과 갑질추방이 가능했다는 해석이다.

〈표 2〉 촛불집회 참여자 로짓 회귀분석 결과

	촛불집회 참여자	상관관계 (촛불집회참석)	로짓 회귀분석(B)
전체(20세 이상) N=1,500	8.9%		15.23**
남자	9.8		
여자	7.9	.033	0.19
20대	18.2		
30대	10.4		
40대	12.7	.185**	1.12**
50대	3.6		
60세이상	2.7		
중졸이하	1.6		
고졸	4.9	.149**	12.6**
대제이상	15.2		
199만원미만	1.1		
200-299만원	4.2		
300-399만원	5.9	.184**	1.01
400-499만원	12.0		
500만원이상	16.4		
인터넷카페/커뮤니티	26.4	.157**	1.03**
정당/정치단체	25.0	.051*	0.78
구호/복지단체	17.2	.059*	0.03
시민사회단체	13.6	.020	0.56
직장/노조/직능단체예체능	13.3	.049	0.08
/취미동호회	12.1	.033	0.04
동창회/향우회	11.6	.085**	0.49
종교단체/소모임	11.4	.039	0.51
자녀학교/학부모회	9.6	.007	0.26
전우회/재향군인회	9.1	.001	-
친목회/계모임	8.8	.005	-
지역풀뿌리조직	2.3	.028	-
자조모임	1.5	.055*	-

참고: (유의수준) * 0.05, ** 0.01

2) IT 혁명 → 생활민주화

둘째, 미투운동이나 갑질저항의 생활민주화의 핵심적인 배경요인으로 IT 혁명을 주목해볼 수 있다.

(1) IT 혁명 → 촛불혁명

IT는 촛불혁명에서 숨은 공로자였다. IT는 개인들의 인터넷과 휴대폰을 촘촘이 연결시켜 온라인 네티즌들을 오프라인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게 만든 절망과 분노의 기폭제, 증폭제 역할을 했다.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시청에서 촛불을 켜들기 시작한 것은 태블릿 PC 폭로 사흘 뒤 10월 29일 주말부터였다. 이후 매 주말(토, 일) 마다 적게는 수십만 명, 많게는 수백만 명이 '진실을 향한 촛불' 행진이 현재 판결까지 5개월 지속되었다. 촛불의 대행진은 얼어붙은 아스팔트를 녹이며 거침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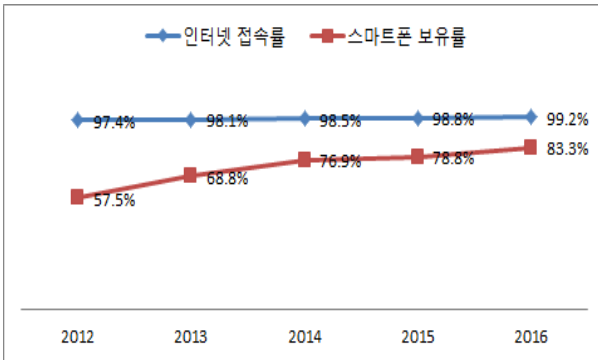
IT는 2016 촛불혁명이 운동이나 항쟁으로 그칠지도 모를 것을 '혁명'으로 발전시킨 인프라였다. IT가 남긴 지울 수 없는 사실이 '진실을 향한 촛불 행진'의 일등공신이 라 볼 수 있다. IT는 역사적 사실을 매일같이 하나 하나 생산하고 저장, 보관해 언제고 누구나 필요에 따라 사용하거나 공유하게 하는 '조용한 혁명'을 먼저 시작했다.

개인들의 집회 참여 또한 IT 혁명의 성장과 밀접히 관련된다. 시민들은 인터넷, SNS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입수해 공유하며 '비판적' 식견을 갖춰 국정과 사회문제를 비평하는 시민들로 성장하고 있다. 촛불집회가 시작된 2002년부터 시민들은 인터넷 등으로 정보를 접해 광장에 나와 촛불을 켜들기 시작해, 2016년 말에는 시민혁명의 절정을 만들었다(주성수 2017a: 32-33). 2002-16년 기간 IT와 SNS 기술혁명의 급성장이 촛불 시민들의 참여혁명을 뒷받침해준 혁신적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 역사상 최대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촛불혁명 기간의 인터넷 접속률 99%, 스마트폰 보유률 83%로 피크에 달했다. 네티즌들의 자기 목소리와 표현이 온라인에서 거리와 광장으로 넘치며 직접행동으로 진행되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한 것이다.

통계를 살펴보면, 모바일 인터넷을 포함한 가구당 인터넷 접속률이 2015년 98.8% → 2016년 99.2%로 증가했다. 한편 성인 스마트폰 사용률은 2017년과 18년에 93%에 달했다. 매년 7월 기준으로 조사한 한국갤럽 조사에서 2012년 62%, '13년 73%, '14년 80%, '15년 84%, '16년 89%에서 급상승한 것이다.⁸⁾

〈그림 2〉 인터넷 접속과 스마트폰 보유



자료: 한국정보통신진흥원 (2017) “2017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p.38.

(2) IT 혁명 → 생활민주화

촛불혁명 이후에도 IT는 강한 위력을 잃지 않았다. 촛불혁명이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된 것도 IT의 파워다. IT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지도층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자 무기라 볼 수 있다. 정치지도층이

⁸⁾ 한국갤럽 2018.8.8.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권력으로, 경제 지배세력이 금권으로 지배하는 세상에 일반 시민들은 IT로 무장하게 된다. IT의 사회적 생산물인 인터넷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비용이 들지 않는 거의 공공재(public goods)와 같은 것이다. 인터넷은 리후킨(J. Rifkin 2015)이 이야기하는 '제로 한계비용'(zero marginal cost)을 대표하고, 그 최대 수혜자는 시민 개인들이다.

IT의 사회적 생산물인 인터넷 등은 준공공재이기 때문에 지도층도 그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지만, 지도층에게 IT는 자신의 가치, 지위, 권력을 약화 또는 무력화시키는 양날의 칼이다. 지도층 중에도 IT의 가치와 위력을 잘 활용해 부와 권력을 쌓고 있는 새로운 지도층도 있다. 지도층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지도층은 IT가 탄생시킨 인물들로 IT의 합리성, 전문성에 충실하며 전통적인 지도층을 위협한다.

인터넷 등은 일반시민들 누구나 배제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공공재가 되며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시민으로의 성장을 돕는다. 잉글하트(Inglehart 1977, 1999)의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에서 물질적 풍요를 누린 대중들은 황금만능주의 사고나 권위에 대한 존중과 같은 전통적인 구습에서 벗어난 포스트모더니스트로 성장한다. 지난 30년간 시민들의 가치관과 행태를 조사한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는 '합리적'(rational) 가치관과 '자기표현'(self-expression) 시민들의 성장을 포스트모더니스트 특징으로 제시해준다.⁹⁾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 IT가 무너뜨리고 있는 구습이나 악폐의 울타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갑질저항, 미투운동 모두가 온라인에서 개인들의 소통과 대화가 이뤄진 다음, 언론에 제보되거나 보도되고 사회이슈가 되는 경로를 거치고 있다. 이제 누구나 '알 것을 다 알 만한' 세상에서 과거 소수 기득권만이 누렸던 정보나 지식은 더 이상 독점물이 아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뉴스를 쉽게 접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인이 세계 제1수준의 온라인 뉴스 검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3).

9) 세계가치관조사 사이트 참고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CContents.jsp>

〈표 3〉 뉴스를 보기 위해 얼마나 자주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이용하는가?(2017년)

국 가 순 위	하루 수차례	하루 1회	합 계
1. 한국	47%	10%	57%
2. 캐나다	27	15	42
3. 호주	31	10	41
4. 스웨덴	28	12	40
5. 미국	28	11	39
6. 스페인	26	12	38
7. 이스라엘	25	13	38
8. 러시아	25	11	36
9. 프랑스	24	12	36
10. 영국	24	12	36

자료: PEW Research Center "2017 Global Attitudes Survey." in B.Chakravorti, "The world's digital divisions are deeper than you might think." World Economic Forum 31 Jul 2018.

3) 직접행동주의 → 생활민주화

촛불혁명과 IT 혁명에 이어 개개인의 직접행동 또한 지금의 생활민주화의 핵심 배경요인이다. 흩어진 독자적인 개개인들이 소통과 공감으로 연대해 직접행동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미투운동, 갑질저항, 비리고발에 나선 개인들의 생활민주화 운동의 공통된 특징이 된다.

(1) 대의제도에 대한 불신

직접행동은 오랜 전통을 가진 시민참여의 한 형태이지만, 세계적으로 관례적 참여 형태처럼 일상화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전통적인 집회와 시위 등도 중요하지만 IT 혁명의 영향으로 갑질폭로, 미투운동, 비리고발에 동참하는 온라인 발언이나 시위 등이 새로

은 직접행동의 양식이 되고 있다.

직접행동이 일상화되는 배경요인으로는 우선 대의민주제에 대한 강한 불신이라고 볼 수 있다. 대의 제도에 대한 불신이 생활민주화를 바라는 시대적 요청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에서 고발, 폭로 등이 폭발하면서, 여기에서는 IT 혁명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 정부 등에 대한 불신이 늘어난 것도 인터넷 등으로 개인들이 많은 정보와 지식으로 접하면 발생하는 동향으로 볼 수 있다.

정부기관에 계속 실망하다보니 남이 나를 대변해주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내가 직접 나서 행동하고자 하는 '직접 행동주의'가 부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권력과 결탁한 사법농단이 발생한지 오래지만 사법부가 스스로 문제해결을 못하자 판사들이 사법농단을 일으킨 동료판사들을 처벌하라며 직접행동에 나섰다.

〈표 4〉 한국인의 국가기관과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도: 1981-2017

	<1981>	<1990>	<1996>	<2002>	<2010>	<2014>	<2017>
국회	68.2	34.1	31.1	13.3	25.5	18.8	22.3
사법	80.8	67.6	58.6	52.8	66.7	45.8	50.7
정부	-	-	43.9	34.6	49.5	40.9	56.2
정당	-	-	25.0	12.0	26.1	-	-
군대	86.7	79.7	70.7	59.1	63.5	34.8	62.5
경찰	73.3	53.0	47.5	34.6	58.7	42.6	56.9
언론	69.2	66.3	64.7	54.0	61.0	43.6	45.2
기업	54.3	35.3	34.7	42.4	55.9	43.4	41.6
노조	60.1	66.6	55.7	35.7	38.6	-	-
시민단체			69.7*	77.1	62.4**	68.3	67.4

참고 * 1999, ** 환경단체. 설문조사에서 많이 또는 다소 신뢰한다는 응답자 비율(%)
 자료: 1981, 1990, 1996, 2010 World Values Survey; 2002 Gallup International.
 2014, 2017 한국갤럽 <전국 자원봉사실태조사>(행정안전부).

직접행동으로 문제해결을 호소하는 개인들이 늘고 있다. 세월호 참사 같은 국가적 재난, 그리고 성폭력, 몰카 등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켜줄 안전한 곳도 공정한 중재자도 더 이상은 없다는 생각이 팽배하고 있다. 개인화 시대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이다. 자신이 직접행동 하지 않으면 나도 내 가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의식에서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직접행동에 나서며 문제해결의 효능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2) 직접행동 : 집회와 시위, 불매, 온라인 의견제시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집회와 시위, 불매운동은 1982-2002년 기간에 상승했다. 2011-18년 기간의 <사회통합조사> 자료를 보면, 집회와 시위, 불매, 온라인 의견제시 모두 상승 또는 현상 유지 수준을 보여준다. 촛불혁명까지의 집회와 시위는 노조 등의 조직동원보다는 자발적인 시민참여의 폭증에 따른 것이다.

〈표 5〉 직접행동 : 집회와 시위, 불매, 온라인 의견제시 참여율(%)

	집회와 시위	불매운동	온라인 의견제시
1982	5.4	1.8	
1990	18.9	10.5	
2002	18.7	7.3	
2011	2.9	3.7	4.1
2013	7.5	9.8	14.2
2014	9.2	12.8	15.0
2015	7.6	9.2	14.7
2016	6.9	10.3	13.3
2017	14.4	8.5	12.2

참고: 전국 설문조사에서 지난 1년간 참여했다는 응답자의 비율(%).

자료: 1982, 1990, 2002 (World Values Survey, 15세 이상 대상);

2011-2017 (각년도 사회통합조사, 18세 이상 대상).

OECD 4개국과 비교한 한국인의 직접행동 참여율은 일본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1982~2010년 30년 기간의 추이는 가장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보여준다. 서명, 불매운동, 평화적 시위 참여 모두가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미국, 호주, 스웨덴 등 서구에서 직접행동은 이제 ‘비관례적’ 참여에서 ‘관례적’ 참여로 일상화된 것(Goldstone 2003; Jordan 1998)이 ‘포스트모던’ 사회의 한 특징이다. 직접행동의 확대는 대의민주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시민참여 개혁이라는 것이 서구에서는 이제 주류 시각이다(Council of Europe 2004a, 2004b).

한국 또한 대의민주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개인들의 직접행동 등 시민참여 확대로 포스트모던 사회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2016-17년 촛불혁명이 강력한 촉발 배경이 되면서 그 이동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표 6〉 OECD 4개국과 비교한 한국인의 직접행동(서명, 불매, 시위)

	서명		불매운동		평화시위	
	1982	2010	1982	2010	1982	2010
한 국	15.7%	26.4%	1.8%	5.4%	5.4%	9.5%
일 본	42.4	28.0	2.4	1.4	7.0	3.6
미 국	65.5	60.1	14.8	15.5	12.0	13.7
호 주	68.6	70.1	4.7	14.6	12.0	17.5
스웨덴	53.4	68.0	7.8	21.9	15.1	20.8

참고: 지난 1년간 참여했다는 설문 응답자의 비율(%). 한국(1982), 다른 5개국(1981); 한국, 일본(2010), 미국, 스웨덴, 스페인(2011), 호주(2012).

자료: World Values Survey, 온라인 자료분석.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ONline.jsp>

앞서 IT 혁명의 영향을 살펴보았듯이 온라인 소통과 공감을 통한 직접행동이 지금의 생활민주화의 한 특징으로 보여진다. 김현미(2018: 1-2)에 따르면, 직접행동주의 원칙에 의거한 새로운 온라인 세대들은

디지털 세계에서 놀고, 학습하고, 관계를 맺는 것에 익숙하고, 자신의 욕망과 정체성의 공적 발현에 주저함이 없는 세대다. 김현미(2018: 4)는 “온라인 페미니스트들은 스스로를 생활 페미니스트로 부른다”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상호 학습과 의식화의 장을 연 것,” 그리고 “페미니즘을 접했건 접해보지 않았건 여성들은 진입 장벽을 느끼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기회를 특성으로 설명한다. 또 내부 고발자와의 연대의식을 연구한 이종혁(2018) 교수팀의 연구를 보면 다른 어떤 원인보다 여러 사람들과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내부고발자와의 연대의식이 온라인 대화와 오프라인 대화는 물론 참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투명사회 → 직접행동

그런데 국민의 강한 불신을 받아온 정부가 그간 잘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열린 정부, 투명사회에 대한 투자다.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를 갖추고 있고, 온라인 시민참여도 세계 최고수준이다. UN, OECD가 그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다.¹⁰⁾ 공공기관뿐 아니라 사회기관, 기업들도 투명성뿐 아니라 시민들의 문제제기에 답할 의무, 즉 ‘책무성’(accountability)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¹¹⁾

언론과 시민사회의 ‘책무적’ 역할도 개인의 직접행동에 사회적 효능

¹⁰⁾ OECD는 2001년부터 한국의 전자정부가 OECD 상위권이라는 평가를 해왔다(OECD 2001, 2017). 또 UN이 실시하는 「2018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한국은 온라인참여 부문 공동 1위(덴마크, 핀란드), 전자정부 발전부문 종합 3위(1위 덴마크, 2위 호주)를 차지하였다. 2010년부터 매년 두 개 부문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8), “UN 전자정부 평가, 韓 참여지수 공동 1위 발전지수 3위.”, 청와대 국민청원 등 온라인 참여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¹¹⁾ ISO26000 등 글로벌 인증기관들이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까지 투명성과 책무성의 인증을 글로벌 표준으로 제시해 이들이 일제히 동참하는 동향이다(주성수 2018: 495).

감을 갖게 해준다. 언론의 경쟁적인 보도를 통한 주창활동은 촛불혁명
뿐만 아니라 지금의 갑질추방, 미투운동, 비리추방에 나서는 개인들에
게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들이 주도하
는 분위기에서 주로 입법과 정책 시행을 압박하는 주창자 역할을 하
며 피해자나 고발자의 2차 피해 예방 등 보호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운동은 개인화로 분출된 개인들의 요구들을 따라가지도
못하는 한계에 달했다.¹²⁾

4) 국력신장과 생활불안 → 생활민주화

넷째, 그간의 국력의 신장의 명암 또한 지금의 생활민주화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배경요인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1) 국력의 신장 → 사회적 효능감

경제수준과 교육, 건강수준 등 웰빙을 복합한 UN의 '인간개발지
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를 보면 대한민국은 2017년 세계
22위로 이미 선진국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UNDP 2018). 이처럼 국력
이 신장하면 사회적 불합리나 부조리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
다. 갑질추방이나 미투운동이 이런 국력신장의 정치, 사회, 문화적 배
경에서 등장해, 이제 국력 수준에 걸맞게 해결될 이슈들로 제기된 것
이다.

이 같은 생활민주화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국력신장의

¹²⁾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요즘 사회적인 이슈에 목소리
를 내는 청년들은 과거의 '권'(운동권)을 체질적으로 싫어하고 단체에 소속되기도 꺼
린다. 구호와 투쟁가도 거부한다. 기존 운동이 시민들의 새로운 요구와 특성을 따라
가지 못하는 사이 시민들은 개인화하고 흩어졌다. 기존 운동의 한계는 명확해졌는데
새로운 운동이 떠오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서울신문 인터뷰 2018.11.19).

역사는 무수하고 다양하다. 30년 전의 87년 민주항쟁의 역사를 비롯해,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극복 금모으기 운동 등이 국민의 위극복 참여 역량과 사회 효능감 축적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88 올림픽과 2018년 평창 올림픽, 2002 월드컵 개최뿐 아니라, 영화, 드라마의 한류와 K-POP, 방탄소년단 등도 빠트릴 수 없는 국력 신장의 자산들이다. 또 위안부 할머니들의 굴하지 않는 저항 정신도 위대한 역사로 기록되고 있어, 국내 미투 운동의 뿌리는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폭로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또 최근엔 남북관계의 급진전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며 생활민주화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2) 국력신장 -> 생활불안

국력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재화(public goods)로, 갑질추방이나 미투운동에 나선 개개인들에게 상당한 사회적 효능감을 주고 있다. 그런데 국력 신장으로 환경오염, 미세먼지 등 공공악화(public bads) 또한 양산되고 있다. 국력이 크게 신장되면서 양극화와 저성장, 4차 산업혁명으로의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까지 개인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안이 되고 있다. 이들이 개개인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도 일상에서 경험하는 부당함이나 부조리에 목소리를 높이게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촛불혁명 이후 10여년 기간에 사회 이슈로 제기된 위협과 불안 유형들을 정리하면 <표 7>과 같이 다양하며, 지금도 생활민주화를 요청하는 주요 배경으로 부각되고 있다.

〈표 7〉 생활불안 유형

- 범죄: 살인, 강도, 군구타사망, 음주운전사망
- 전염병(신종질병)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 사스, 메르스, 계란 파동
- 자연재해(기후변화) : 황사, 미세먼지, 폭염, 폭한,
- 인재: 세월호참사, 가슴기살균제, 의료사고
- 생계 불안 : 빈곤, 일자리불안, 빈부격차, 양극화, 노후불안
- 건강 불안 : 먹거리, 농약, 화학비료사용, 라돈 방사능 침대, 생리대, 아파트
- 신변 불안 : 밤거리, 몰카, 악플, 신상털기
- 미래 불안 : 청년(삼포세대), 결혼, 연애, 출산/육아, 4차산업혁명
- 폭력 불안 : 갑질, 성폭력, 학교폭력, 어린이집폭력, 데이트폭력

이상 최근의 생활불안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생활불안은 개인의 생활세계의 인간안보에 관한 문제로, 국방안보, 정치, 경제 등 거시문제와 구별되는 개인의 사적 생활 문제이다. 그간 정치, 경제, 사회 거대 이슈에 가려져 생활불안 이슈들이 뒷전으로 밀려난 탓도 있지만, 인터넷의 급진전으로 생활불안 정보가 급속히 공유되며 보다 투명해진 변화 때문이기도 하다. 또 실제로 생활불안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진 부분도 있을 수 있다. 2008년 광우병 불안에 직면한 많은 개인들이 처음 촛불집회에 참여한 이후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사회적 참사 때마다 촛불집회가 이어졌다. 가슴기 살균제 사망, 라돈침대나 생리대 방사선 위협 등이 뒤를 이었다.

(3) 생활불안 → 생활민주화

이처럼 생활불안은 '나도 내 가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을 갖게 해, 개개인이 생존권 사수나 보호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피해나 위협으로부터 본능적 방어 행동으로, 인간의 '안전' 기본욕구에 해당된다. 이는 사적 이해추구 행동이 아니라 합리적 이기주의에 해당될 수 있다. 또 미투운동과 갑질추방이 피해자 자신뿐 아니라 불

특정 다수를 위한, 미래세대를 위한 시민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 추구적이다. 이웃과 공동체의 웰빙, 삶의 질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생활민주화의 '민주적'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의 생활불안 의식이 매우 높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의 비율은 50.9%로, 남성보다 10.8% 높게 나타난다.¹³⁾ 분야별로 살펴보면 범죄 발생이 73%로 가장 높고 이어 신종 질병 65%, 정보 보안 53%, 교통사고 52% 등이다. 또 최근 데이트폭력 발생이 늘어나자 '안전이별'을 검색하는 여성들이 크게 늘고 있다.¹⁴⁾ '이별' 하면 생각나는 단어도 '슬픔'에서 '안전'으로 바뀌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을 너무 잘 안다는 공포에,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범행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게 된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경험하며 일부는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장기간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제 개개인들의 관심은 폭력, 위협 등 생활불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자신이 경험한 문제뿐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의 해결에 대해 공감하며 직접행동에 동참하고자 한다. IT 혁명의 영향으로 생활 전반에서 나타나는 불안, 위협, 위기에 대해 수시로 정보를 접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타인들과 공감하며 집단지성을 모으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5) 가치관 변화 → 생활민주화

마지막으로 의식변화 또는 가치관의 변화를 생활민주화의 주요 배

13)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 민관 전문가그룹 조사결과, 연합뉴스TV 2018.11.3.

14) 다움소프트가 실시한 빅데이터 분석. 국민일보 2018.11.10. '안전이별'에 대한 검색량은 2015년 8,000여건에서 2017년 2만4000여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경요인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

(1) 보수와 진보 가치관

지금의 갑질추방이나 미투운동은 '진보적' 운동인가? 미국에서는 미투운동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보수성향의 응답자들이 다소 반대하거나 지지를 유보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미투운동에 대해 보수층보다 진보층이 더 지지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보수, 진보, 중도 모두가 미투운동에 2/3 이상의 절대다수 지지를 보내고 있다(표 6). 또 촛불혁명의 핵심이 되었던 대통령 탄핵에서도 보수가 진보에 비해 지지도가 30%나 차이가 나지만 2/3 절대다수가 지지했다. 한편 성별 차이는 대통령탄핵에서는 남자 86%, 여자 77%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미투 운동에 대해서는 남녀 차이가 없다(68%, 69%). 다만 여성 60세 이상의 지지도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48%).

이렇듯이 이념 성향보다는 연령에 따른 세대 차이가 더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대 차이는 다음의 포스트모던 가치관에서도 비교적 뚜렷하다.

〈표 8〉 대통령탄핵과 미투운동에 대한 지지도: 이념성향/연령별

	이념 성향			연령별				
	보수	중도	진보	19-29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대통령 탄핵 (찬성)	66%	86%	96%	93%	94%	92%	79%	54%
미투운동 (지지)	68%	65%	80%	77%	73%	71%	68%	56%

자료: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대통령탄핵(2016.12); 미투운동(2018.3.20.-22).

(질문) 최근 야 3당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번 주 국회 표결 예정입니다. 귀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질문) 최근 자신이 당한 과거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는 일명 '미투(#MeToo)'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미투 운동을 좋게 보십니까, 좋지 않게 보십니까?

(2) 포스트모더니즘: 탈권위, 생존 → 합리적, 자기표현 가치관

잉글하트(Inglehart 1977, 1999)의 '포스트모던 사회'는 합리적이고 자기표현이 강한 포스트모더니스트가 주축을 이룬다. 그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동하며 전통과 권위 가치가 합리적 가치로 바뀐다. 전통 가치는 권위, 종교, 가족, 가부장제 존중, 애국심, 민족주의 중시의 가치가 지배적이다. 다시 산업사회가 후기산업사회로 넘어가면 생존 가치가 자기표현 가치에 바탕을 넘겨준다. 경제적, 신체적 안정, 낮은 신뢰와 비관용의 생존 가치가 환경보호, 양성평등, 정치, 경제 의사결정 참여 중시의 자기표현 가치로 바뀌는 것이다.

1980년대 초부터 수차례 조사된 세계인의 가치관 의식으로 작성된 <세계문화지도>에서¹⁵⁾ 한국은 일본과 중국과 함께 권위의 전통에서 벗어나 합리적 가치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 좌측에 있는 생존 가치관은 우측의 자기표현 가치관 쪽으로 약간은 옮겨갔지만 여전히 생존 가치관이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촛불혁명 이전의 자료로, 이후에는 좀 더 우측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층이 자기표현이 강해, 가치관 변화의 주축이 되고 있다.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인 한국 사회에서 다른 이들보다 강하게 보여야 한다는 '생존' 의식이 갑질의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최항섭 2017: 265).

4. 생활민주화: 개인이 세상을 바꾸는가?

지금의 갑질추방, 미투운동이 전통적인 권위 중심의 가치관의 장애물을 넘어, 더 나아가 생존의 허들까지 뛰어넘어 진정 의미 있는 변화

¹⁵⁾ 정치학자 잉글하트(Ronald Inglehart)와 웰첸(Christian Welzel)이 작성한 문화지도. 세계가치관조사 사이트 참고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VSContents.jsp>

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경제침체가 깊어지면 생활민주화가 사회이슈나 국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 시들해질 우려도 있다.

개인의 사회적 효능감이 늘고 있는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고발 등 직접행동에 나서는 개인들은 제한적이다. 직장 내의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 응답자의 31.5%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는데, 하지만 이들 중 41.3%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답했다.¹⁶⁾ 그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5.5%),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4.1%)였다. 갑질 또는 내부비리를 고발하는 공익제보도 제보자들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음에도 직장퇴출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¹⁷⁾

미투운동의 경우, 미국에서는 여론의 지지가 2018년 2월말에 51%에 그쳤다. '달라진 게 없다'는 의견이 26%, 또 '남성을 부당하게 취급한다'는 부정적 의견도 20%에 달했다.¹⁸⁾ 미국은 세계문화지도에서 자기표현 가치관이 높지만 한국과 유사하게 '권위에 대한 존중' 가치관이 북유럽권에 비해 강한 편이다. 가족과 종교 중시의 문화 영향 때문이다. 또 2017년 11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제 자신의 가해자들에 맞서 당당히 목소리를 낸다'는 의견이 62%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20%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느꼈다고 답했다(Gallup

16) 2017.10월 직장갑질119 조사 결과.

17) 2018.11.17. SBS 뉴스토리 <악몽이 된 공익제보> 방송. 그래서 공익제보자 모임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절대 제보하지 마십시오. 우리처럼 인생 거덜 납니다"고 피켓 시위를 할 정도에 이르렀다. 제보자들이 직장에서 각종 불이익을 당해 결국 퇴출되는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또 시민단체 호루라기 재단이 공익신고자를 심층조사한 결과는 42명 중 25명이 파면 또는 해임조치를 당했고, 28명은 생계곤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난다(주성수 2017a: 376).

18) NBC 방송사 조사결과.<https://www.nbcnews.com/politics/politics-news/poll-majority-says-metoo-movement-has-helped-address-gender-inequality-n854576> 또 2018년 4월 여론조사에서 여성 63%가 남성에 대한 부당한 비난을 다소 또는 매우 우려된다고 답했고 여성 응답자 60%가 일할 기회 상실을 우려했다.

<https://www.vox.com/2018/4/5/17157240/me-too-movement-sexual-harassment-aziz-ansari-accusation>

2017). 그 이유가 자신의 회사가 자신을 얘기를 들어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 얘기하면 여성 피해자들 다수가 여전히 직장에서 자신들을 믿고 지지해 줄 것이라는 신뢰감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일상에서의 부조리, 불균형한 권력과 폭력을 둘러싼 구태와 악습을 추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생활민주화를 요청과 지지가 지속된다면 생활민주화는 지속가능하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상식'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갑질저항과 미투운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나 그로 인한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직장 분위기 위축, 인간관계의 불편함 또는 소원함, 세대 갈등, 전통적인 권위에 대한 불신, 타인에 대한 불신 등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과제가 된다.

갑질과 성폭력은 일상에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활민주화는 지인, 상사, 선후배, 사제, 이웃이 인간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기본적인 인간안보를 추구한다. 성폭력피해 폭로 이후 2차 피해에 시달렸다는 서지현 검사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강자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비열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자신이 받아야 할 비난과 고통을 피해자의 몫으로 돌리고 사회는 그 관행을 용인해주고 때로 동조해줬죠. 결국 피해자들만 죽음으로 내몬 사회...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¹⁹⁾

갑질과 성폭력 이슈들은 지금 법 제정이나 개정이 지연되는 상태에 있다. 인간성을 훼손하는 구태와 악습을 청산하려는 생활민주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생활민주화는 네트워크된 개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시민사회와 언론의 주창 역할이 뒷받침되고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파

¹⁹⁾ 경향신문 인터뷰 2018.11.10. <https://news.v.daum.net/v/20181110060024610>

트너십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최근 정부가 갑질, 채용비리 등을 '생활 적폐'로 청산의 대상으로 삼고 나선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런데 생활민주화로 나타나는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는 더디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거나 시민사회가 시민교육을 하는 방식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래로부터 시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임파워먼트를 기반으로 의식과 가치관에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사회 시스템 개혁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생활민주주의는 가정부터 시작해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새로운 '사회화'(socialization)를 요청한다. 동시에 대학과 직장, 공공기관과 사회기관 모두가 폭력과 폭언, 몰카, 갑질 등을 추방하는 자율적인 교육과 학습의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교육과 학습의 과정도 정부나 사회기관 등의 중앙집중적 하향식(top-down)이 아니라 생활민주화의 원리를 적용시켜 민주적 상향식(bottom-up)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민주적'이란 개인들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이해와 소통과 학습을 통해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식을 모색하는 지속적인 인내의 과정을 의미한다. 갑질이나 성폭력 등 타인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상호 존중과 소통이 생활민주화의 예방적 처방이 될 것이다.

(접수 2019. 4. 11. 심사완료 2019. 5. 9. 게재확정 2019. 5. 20)

참고문헌

- 김현미, (2018) "직접행동주의와 페미니즘 정치, 그 이후." SDF 전문가포럼 발제문. 2018.10.5.
- 이선미, (2018) "개인 권력 시대의 함께 사는 문제." <새로운 상식, 개인이 바꾸는 세상> SDF 2018 연구보고서.
- 이종혁 외, (2018). "고발(이슈)의 확산, 공감, 연대, 참여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 SDF 전문가포럼 발제문. 2018.10.12.
- 조희정, (2018) "깃발 내려, 나는 내가 대표한다." <새로운 상식, 개인이 바꾸는 세상> SDF 2018 연구보고서.
- 주성수, (2015) "세월호 참사 관련 시민참여와 자원봉사." <시민사회와 NGO> 13/1, 5-31.
- 주성수, (2017a) <한국 시민사회사 : 민주화기(1987-2017)> 학민사.
- 주성수, (2017b) "2017 전국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 꺾림조사결과포.
- 주성수, (2018) <시민사회, 제3섹터, 비영리섹터, 사회적경제>. 한양대 출판부.
- 주성수 외, (2019). <새로운 상식, 개인이 바꾸는 세상> SDF 2018 연구보고서.
- 최향섭, (2017) "모두가 감이 되고 싶은 사회," <사회과학연구> 제30집 2호.
- 한국꺾림, (2016) <한국 꺾림 데일리 오피니언> 제239호. 2016.12.6.-8.
- 한국꺾림, (2018) <한국꺾림 데일리 오피니언> 제299호. 2018.3.20.-22.
- 한국정보통신진흥원, (2017) "2017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 홍찬숙, (2018) "개인화 시대의 새로운 사회운동과 한국사회 변동의 방향: 촛불 혁명과 미투운동 중심으로." SDF 전문가포럼 발제문. 2018.9.21.
- Benkler, Y. (2006) *The Wealth of Networks : How Social Production Transforms Markets and Freedom*.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Benkler, Y. (2011) *The Penguin and the Leviathan: The Triumph of Cooperation Over Self-interest*. New York: Crown Business.
- Chakravorti, B. (2018) "The world's digital divisions are deeper than you might

- think." *World Economic Forum* 31 Jul 2018.
- Council of Europe. (2004a) *Developing Democracy in Europe*. Belgium: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Council of Europe. (2004b) *The Future of Democracy in Europe*. Belgium: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Gallup, (2017) "Majority of Americans Favor #MeToo and Want More Done on Fighting Violence Against Women."
- Goldstone, J. (2003) *States, Parties, and Social Moveme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 (1977) *The Silent Revolu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 (1999) "Postmodernization Erodes Respect for Authority, but Increases Support for Democracy." In Norris, P. (ed)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Jordan, G. (1998) "Politics without Parties: A Growing Trend?" *Parliamentary Affairs* 51/3. 314-328.
- OECD, (2001) *Citizens as Partners: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7) *Open Government*. OECD Publishing, Paris
- Rifkin, J. (2015) *Zero Marginal Cost Society*. New York : St. Martins.
- Rosenblum, N. (2016) *Good Neighbors : Democracy in Everyday Lif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tears, M. (2011) *Everyday Democracy*. London: Institute of Public Policy Research.
- UNDP, (2018) *2018 Human Development Report*. New York.
- Verba, S., Schlozman, K., and Brady, H.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Democratization in everyday life in the era of
individualization :
Gap-jil and MeToo after the Candle-light Revolution

Joo Sung Soo

A new era of participation explosion of direct actions led by individuals such as Gap-jil, Mee-Too, whistle-blowing is becoming 'revolutionary' in that participating individuals are attempting to change the state, market and civil society. The current trend of 'individuals changing the world', if strong and sustainable enough to be irreversible, might bring a paradigm shift of democratization : from politics to everyday life.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the current trend of individu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of everyday life in terms of major background factors, by taking examples of Gap-jil, MeeToo, whistle-blowing movements in Korea. The 2016-17 'Candle-light Revolution' is seen by many researchers as the major factor of the current revolutionary change in everyday life in particular. The democratization of everyday life is, however, a multi-factor phenomenon and its explanation should be based on a holistic approach.

The literature review suggests a definition of 'democratization of everyday life' as "a process by which individuals raise questions of unfair, immoral, violent experiences, communicate with others to make an issue, and suggest resolutions or improvements by participating in direct actions." This study focuses attention on the analysis of such factors as national development, IT revolution, Candle-light Revolution, direct actions, individual values change. To suggest a conclusion, it is uncertain that the current trend of Gap-jil and MeToo movement by individuals would overcome the huddles of both the traditional value of 'respect for authority'

and deeply rooted individual values of survival over self-expression such as Gap-jil or Metoo.

Keywords : democratization of everyday life, everyday democracy, MeToo, Gap-jil, whistle-blowing, individualization, values change